

# 헌법각론

9주차

이정덕 교수

### 직무 및 종류

-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기타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
- 17개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종류 및 소관

#### 국회운영위원회

- 국회운영에 관한 사항
- 「국회법」 기타 국회규칙에 관한 사항
- 국회사무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 국회도서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국회예산정책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 국회입법조사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 국가인권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법제사법위원회

- 법무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법제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 감사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 헌법재판소 사무에 관한 사항
- 법원·군사법원의 사법행정에 관한 사항
- 탄핵소추에 관한 사항
- 법률안·국회규칙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

#### 정무위원회

-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 국가보훈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 금융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 기획재정위원회

- 기획재정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한국은행 소관에 속하는 사항

#### 교육위원회

- 교육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 제2절 국회의 조직

### 외교통일위원회

- 외교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통일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에 관한 사항

### 국방위원회

- 국방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행정안전위원회

- 행정안전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인사혁신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사항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해양수산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보건복지위원회

- 보건복지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 환경노동위원회

- 환경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고용노동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국토교통위원회

- 국토교통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정보위원회

- 국가정보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 대상부처 소관의 정보예산안과 결산심사에 관한 사항

### 여성가족위원회

- 여성가족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직무 및 종류

- 상설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비상설특별위원회 : 수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심사
- 비상설특별위원회는 활동기한 종료시까지 존속하며,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봄
- 특별위원회 종류 및 소관

#### 예산결산위원회

-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 심사

#### 윤리특별위원회

- 의원의 자격심사·징계에 관한 사항

#### 인사청문특별위원회

- 헌법에 의하여 그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감사원장 및 대법관과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한 인사청문, 대통령 당선인이 인사청문의 실시를 요청하는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 기타 특별위원회

- 수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
- 구성할 때에 정해진 활동기한이 종료하거나 그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존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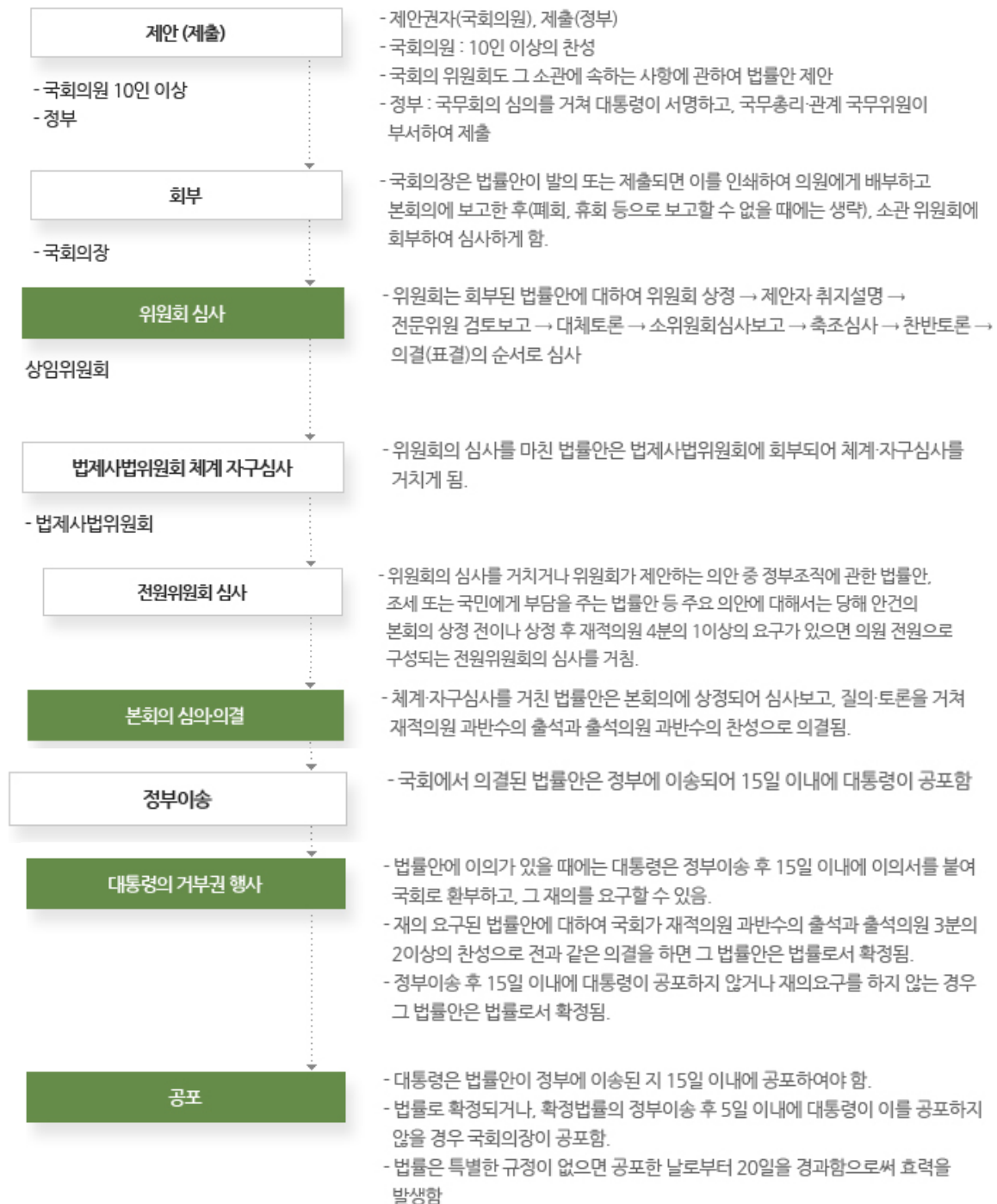
### 위원 선임 및 개선

-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상임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개선의 예에 준하여 의장이 상임위원중에서 선임 및 개선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은 교섭단체 소속의원수의 비율과 상임위원회의 의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선임

## 헌법개정 절차



## 제2절 국회의 조직



## I. 회기

### 1. 연중상시개원체제

국회의 연중상시활동을 위하여 첫째, 국회의장은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연도의 국회의 연간국회운영의 기본일정을 정해야 하고, 둘째, 2월.4월.6월의 1일에는 반드시 30일 회기의 임시회를 집회하도록 하고 **8월16일에도 임시회를 집회한다.** 단, 8월 16일에 집회하는 임시회의 회기는 8월 31일까지로 한다.

#### (1) 정기회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소집되는 국회이며 헌법에서는 '매년 1회 집회된다.'고 하고, 국회법에서는 '매년 9월 1일에 집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2) 임시회

- 필요에 따라 수시로 행하는 집회로서 임시집회의 필요가 있을 때에 대통령 또는 국회의 재적 의원 4분의1 이상의 요구로 집회한다(헌법 제47조 제1항).
-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정하여야 하는데(국회법 제7조 제2항),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헌법 제47조 제2항).
- 의결로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2월.4월.6월의 1일에 개최하는 임시회는 상시운영체제강화를 위해 30일간 고정으로 집회한다.

## 2. 회기제

- 입법기 : 국회가 구성되는 시기로부터 임기가 만료되거나 국회가 해산되기까지의 시기
- 회기 : 입법기 내에서 국회가 실제로 활동능력을 가지는 일정한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소집일(집회일)로부터 기산하여 폐회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

### (1) 회기의 상한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고,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초과할 수 없다(헌법 제47조 제2항).

### (2) 회기의 연장

국회는 회기 중에 예정된 안건을 처리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정기회는 100일을, 임시회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 II. 국회의 의사절차에 관한 원칙

**헌법 제49조**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국회법 제54조**(위원회의 의사정족수·의결정족수) 위원회는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국회법 제73조**(의사정족수) ① 본회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③ 회의 중 제1항의 정족수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의장은 회의의 중지 또는 산회를 선포한다. 다만, 의장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의사정족수의 충족을 요청하는 경우 외에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회의를 계속할 수 있다.



### Ⅲ. 회의의 원칙

#### 1. 의사공개 원칙

**헌법 제50조** ①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내용의 공표에 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2. 회기계속 원칙

**헌법 제51조**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회기불계속과의 비교 : 회기계속의 원칙은 국회가 이미 중에는 동일성을 가지며 불계속이란 매 회기마다 독립된 의사를 가진다는 것을 근거로 함. 따라서 전회기의 의사는 다음 회기의 의사를 구속하지 못한다는 논리임.
- 예외 : 회기계속도 하나의 입법기 내에서만 효력이 있으므로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회기가 계속되지 않는다.

#### 3. 일사부재의 원칙

- 소수파에 의한 의사진행 방해방지를 위해 부결된 의안의 동일 회기 내 재발의 또는 제출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헌법에 규정이 없고, 국회법에 규정(국회법 제92조)
- 동일회기, 동일절차, 부결된 경우를 의미함. 동일법안, 거의 동일한 취지. 목적과 동일 내용의 법안, 규정사항이 먼저 부결된 것과 실질적으로 같은 것.

## I. 입법에 관한 권한(5주차 PPT 5, 6장)

## II. 재정에 관한 권한

### 1. 조세의 의의 및 구별개념

- 조세라 함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권력의 주체가 재원조달의 목적으로 그 과세권을 발동하여 반대급부 없이 일반 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부과·징수하는 과징금을 말함.
- 반대급부를 전제로 하는 사용료나 특정공익사업과 이해관계 있는 자로부터 부과·징수하는 부담금과는 구별된다.

### 2. 조세법의 기본원칙 = 조세법률주의 + 조세평등주의

#### (1) 조세법률주의

- 법률에 근거가 없으면 조세를 부과·징수할 수 없고, 국민도 법률에 근거가 없으면 조세납부를 요구받지 아니한다.

①과세요건법정주의 ②과세요건명확주의 ③소급과세금지의 원칙 ④엄격해석의 원칙

⑤실질과세의 원칙 ⑥합법성의 원칙 ⑦납세자의 권리보호의 원칙 등

#### (2) 조세평등주의

- 동일한 담세능력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평등한 과세가 있어야 한다. 형식과 실질이 상이한 때에는 실질에 따라 과세해야한다.

### 3. 예산의 심의·확정권

#### 헌법 제54조

- ①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 ②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 ③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2.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3.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 헌법 제57조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 예산안 심의 절차



## 4. 결산심사권

**헌법 제99조** 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결산 심의 절차



### Ⅲ. 국정통제에 관한 사항

#### 1. 국무총리·국무위원 등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질문권, 대정부 서면질문권

[대통령제에서 이례적으로 국무총리 등의 출석요구 및 질문권 인정]

**헌법 제62조** ①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② 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는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 2. 탄핵소추

**헌법 제65조** ①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 3. 해임건의권

헌법 제63조 ①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해임건의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4. 국정감사.조사권

헌법 제61조 ①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구분	주체.동인	대상	시기	공개성
국정조사	국회 재적의원 1/4 이상 요구로 조사위원회가 담당	특정 국정사안	수시(부정기적)	공개
국정감사	소관 상임위원회별(특별위원회×)로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	법정감사 대상기관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감사시작일부터 30일 이내의 기간	공개

## IV. 국회의 자율권(국회 내부에 관한 권한)(헌법 제64조)

## 【판시사항】

## 노무현대통령 탄핵심판 쟁점

1. 탄핵심판절차에서의 헌법재판소에 의한 판단의 대상
2. 국회의 탄핵소추절차에 적법절차원칙을 직접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6. 대통령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공선법'이라 한다) 제9조의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7. 기자회견에서 특정정당을 지지한 대통령의 발언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8. 기자회견에서 특정정당을 지지한 대통령의 발언이 공무원의 선거운동금지를 규정하는 공선법 제60조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9.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대통령의 의무
10.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법위반 결정에 대한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11. 재신임 국민투표를 제안한 행위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12. 대통령 측근의 권력형 부정부패와 관련하여 대통령의 법위반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13. 불성실한 직책수행과 경솔한 국정운영으로 인한 정국의 혼란 및 경제파탄이 탄핵심판절차의 판단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14.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의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때'란 중대한 법위반의 경우에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16. 대통령의 구체적인 법위반행위에 있어서 헌법질서에 역행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사를 인정할 수 없는 이 사건의 경우 파면 결정을 할 것인지 여부(소극)
17. 탄핵심판절차에서 소수의견을 밝힐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판시사항】

## 박근혜대통령 탄핵심판 쟁점

가. 소추사유의 특정 여부(적극)

나. 국회 의결절차의 위법 여부(소극)

다. 8인 재판관에 의한 탄핵심판 결정 가부(적극)

라. 탄핵의 요건

마. 최○원의 국정개입을 허용하고 권한을 남용한 행위가 공익실현의무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바. 최○원의 국정개입을 허용하고 권한을 남용한 행위가 기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사. 최○원의 국정개입을 허용하고 권한을 남용한 행위가 비밀엄수의무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아. 공무원 임면권 남용 여부(소극)

자. 언론의 자유 침해 여부(소극)

차.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여부(소극)

카. 불성실한 직책수행이 탄핵심판절차의 판단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타. 피청구인을 파면할 것인지 여부(적극)



# I. 국회의원의 지위

## 1. 헌법상의 지위

(1) 국회구성원으로서의 지위

(2) 전체국민의 대표

- ① 국가이익우선의 의무(헌법 제46조 제2항) : 의원의 대의적 지위 확인
- ② 특권부여(헌법 제44조, 제45조) : 대의적 의정활동의 보장 확인
- ③ 의사공개 원칙(헌법 제50조) : 대의적 신임의 바탕이 되는 공개정치 실현

## 2. 의원자격의 발생 및 소멸

(1) 발생 : 다수설은 임기개시설(제21대 국회의원 임기개시일 2020년 5월 30일)

- ① 임기만료에 의한 경우 : 만료일 다음 날부터 의원자격 발생
- ② 보궐선거 : 당선 결정시에 자격이 발생
- ③ 비례대표 의원직 승계의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승계를 결정.통고한 때로부터 발생

(2) 소멸 : 임기만료(보궐선거 당선자는 잔임기간)

- ① 사직(국회법 제135조) : 본인이 서명.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
- ② 당선무효 : 당선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 ③ 국회가 해산된 경우(현행 헌법은 자진해산 외에는 규정이 없다)
- ④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소속 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 외의 사유로 임기 중 당적을 이탈.변경 하거나 2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그 자격이 상실됨. 다만 비례대표국회의원이 국회의장으로 당선되어 당적을 이탈한 경우에는 의원자격을 상실하지 않는다.(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
- ⑤ 위헌정당 해산(2013헌다1, 2015헌아20)

## 【판시사항】

###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쟁점

가. 민주노동당의 목적과 활동이 이 사건의 심판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나.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루어진 정당해산심판청구서 제출안에 대한 의결이 위법한지 여부(소극)

2014. 12. 19.

다. 정당해산심판절차에 적용되는 법령

라. 정당해산심판제도의 의의

마. 정당해산의 사유

(1)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의 의미

(2) “민주적 기본질서”의 의미

(3)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의 의미

(4) 정당해산의 헌법적 정당화 사유로서 ‘비례원칙’의 준수

바. 한국사회의 특수성으로서 남북한 대립상황에 대한 고려의 필요성

사. 피청구인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아. 피청구인에 대한 해산결정이 비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자. 정당해산결정이 선고되는 경우 그 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 【판시사항】

가. 정당해산결정에 대하여 재심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나. 이 사건 재심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 【결정요지】

가. 정당해산심판은 원칙적으로 해당 정당에게만 그 효력이 미치며, 정당해산결정은 대체정당이나 유사정당의 설립까지 금지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오류가 드러난 결정을 바로잡지 못한다면 장래 세대의 정치적 의사결정에까지 부당한 제약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정당해산심판절차에서는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보다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이 더 크므로 재심을 허용하여야 한다. 한편, 이 재심절차에서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법의 재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나. (1) 재심대상결정의 심판대상은 재심청구인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 재심청구인에 대한 정당해산결정을 선고할 것인지, 정당해산결정을 할 경우 그 소속 국회의원에 대하여 의원직 상실을 선고할 것인지 여부이다. 내란음모 등 형사사건에서 내란음모 혐의에 대한 유·무죄 여부는 재심대상결정의 심판대상이 아니었고 논리적 선결문제도 아니다. 따라서 이○기 등에 대한 내란음모 등 형사사건에서 대법원이 지하혁명조직의 존재와 내란음모죄의 성립을 모두 부정하였다 해도, 재심대상결정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재심대상결정에서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을 상실시킨 것이 위법하다거나 재심대상결정 중 경정 대상이 아닌 내용을 경정한 것이 위법하다는 주장은, 재심대상결정이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의 어느 재심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조용호의 별개의견

정당해산결정으로 그 정당의 존립과 활동이 금지되고, 정당의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되며, 해산된 정당과 유사한 목적을 가지는 이른바 대체정당의 창설도 금지된다. 특히그 정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이 상실됨으로 인해 의원직 상실이 발생한 지역구에서는 보궐선거가 이루어짐에 따라 새로운 국회의원들이 선출되어 국회의 구성에도 변화가 있었다. 이처럼 정당해산결정의 효력은 우리 사회의 정치·사회질서에 큰 파급력을 가지므로, 이에 대한 재심을 허용하면 법적 안정성의 토대를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

따라서 정당해산결정에 대해서는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이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보다 더 중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같은 결정은 그 성질상 재심에 의한 불복이 허용될 수 없다.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재심) 쟁점

2016. 5. 26.

## II. 국회의원의 특권

### 1. 의원의 불체포특권

(1) 불체포특권의 의의 : 국회의원은 헌법 제44조에 의하여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 국회의 동의 없이는 회기 중에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하는 권리를 말한다. 면책특권에 대하여 보충적인 기능을 하며, 의원의 신체를 보호하여 대의민주주의를 보장하는 기능을 함.

#### (2) 법적 성질

- ①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 개개인의 특권이자 국회의 특권이라는 것이 다수설.
- ② 국회의원 개인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할 수 없다.
- ③ 회기 중에 한해 일시적으로 체포를 유예하는 특권에 불과하다.

#### (3) 내용

##### ① 사전적 불체포특권(헌법 제44조 제1항)

- 체포, 구금은 형사절차에 의한 경우는 물론 행정상의 강제처분(보호조치, 감호처분)도 포함됨.
- 회기 중에 한해 불체포특권이 인정되는데, 여기서 회기 중이란 집회일로부터 폐회일까지를 의미하며, 임시회이든 정기회이든 불문한다. 그리고 휴회기간을 포함함.
- 직무와의 관련성은 불문한다.
- 국회의 체포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가 가능함.

##### ② 사후적 불체포특권(헌법 제44조 제2항)

- '회기 전'에는 전회기 기간도 포함되며, 전회기에 체포·구금(구속이 아님을 주의할 것)에 대한 국회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현 회기에 석방요구가 가능함.
- 석방요구는 재적의원 1/4 이상의 연서로 석방요구를 발의하고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석방요구를 의결한다.

#### (4) 예외

##### ① 현행범 제외 원칙 :

- 현행범은 불체포특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회기 전에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경우에는 국회의 요구가 있어도 석방되지 않는다.
- 국회 회의장 안에서는 현행범이더라도 의장의 명령 없이는 체포할 수 없고, 의원 이외에 현행범은 체포 후 의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 ② 회기 중 한정 원칙

- 국회의 동의가 있는 경우 불체포특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회기 중에도 국회의원을 체포하거나 구금할 수 있다. 이는 불체포 특권은 국회의 의결로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③ 절차

- 판사는 영장발부 전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정부는 지체없이 체포동의서를 국회에 요청한다.
- 의원 체포에 관하여 국회의 동의를 요청한 경우에 국회의 동의 여부는 국회의 자유재량으로 보는 것이 다수설의 입장이다.
- 국회가 동의를 한 이상 어떠한 조건이나 기한도 붙일 수 없다.
- 회기 전에 현행범으로 구속된 자에 대하여는 국회가 석방요구를 할 수 없다.

## 2. 면책특권

### 헌법 제45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1) 의의

- ① 자유위임적 책임이념에 따라 의원의 발언과 표결상의 독립성을 보장함으로써 의회의 자유로운 토론과 효율적·합리적인 정책결정을 확보하기 위한 절대적 권리
- ② 불체포특권과 함께 의회활동의 독립성을 보장학 위해 요구되는 것이지만, 불체포특권은 의회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정된 제도이기 때문에 그것이 다른 목적을 위하여 남용 또는 악용되어서는 안됨.
- ③ 정당한 이유가 있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부가 의원을 체포하는 경우에는 이 특권이 인정 되지 않음.

#### (2) 법적 성격

- 인적 처벌조각사유(절차법상의 특권)에 해당한다. 임기만료 후에도 소추 불가하며, 국회의 의결로도 그 효력을 제한할 수 없다.

## (3) 내용

- ①주체 : 국회의원에 한정되므로 국무총리, 국무위원, 참고인, 증인, 보좌관, 또는 그에 대한 교사자. 방조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 ②면책의 대상
  - '국회 내'라 함은 의사당 뿐 아니라, 의사(본회의, 상임위원회, 교섭단체)진행 장소를 포함한다 (실질적 파악). 그래서 서울시에서 국정감사를 하는 경우에는 인정된다. 다만 원내에서 행한 발언과 표결일지라도 그것을 다시 원외에서 발표하거나 출판하는 경우에는 면책되지 않는다.
  - '직무상'의 행위에는 직무수행 자체뿐만 아니라 부수적 행위도 포함하며, 폭력.야유 등은 해당 되지 않으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다수설).
  - 발언, 표결이란 의제에 관한 모든 의사표현을 말한다. 또한 의사표시만이 아니라 의제에 관한 찬.반 표시를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행위도 포함된다. 즉, 퇴장이나 의사진행 방해도 이에 속한다고 볼 수 있음.

## (4) 면책의 효과

- ①인적 처벌조각사유로서 민.형사상 책임은 면제됨.
- ②국회의원 면책특권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의 규정에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는 사유로서 법원은 판결의 형식으로 공소기각판결을 해야한다. 그러나 국회 내.소속정당으로부터 징계책임 또는 선거구민에 대한 정치적 책임까지 면할 수는 없다.

### Ⅲ. 의원의 권한·의무

#### 1. 국회활동에 관한 권한

##### (1) 발의권

- 법률안, 헌법개정안, 탄핵소추, 의안 등을 발의할 수 있으며,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한다고 하더라도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가 가능하다.

##### (2) 질문권

- 현재 의제와 관계없이 정부에 대해 질문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서면질문, 긴급질문(구두) 등이 인정된다. 20인 이상의 의원이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에 대해 출석요구를 하여야 하며, 질문요지서는 질문 전 48시간 전에 도달하여야 한다.

##### (3) 질의권

- 현재 의제가 되고 있는 의안에 대한 구두질문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질의권이라고 한다. 의장, 위원장, 발의자,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에 대해 질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 (4) 토론권

- ① 의제가 된 의안에 대해 토론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② **무제한 토론** : 의원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이 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토론을 하려는 경우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여야 한다(국회법 제106조의2 제1항).

##### (5) 발언권 : 대정부질문, 의사진행발언, 신상발언, 자유발언

- 동일 의제에 대한 발언은 2회로 제한한다.



## (6) 표결권

## ① 표결의 방식

-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이 원칙. 투표기기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기립표결을 할 수 있다(국회법 제112조 제1항).
- 본회의 의결 또는 재적의원 1/5 이상의 요구에 의해 기명.호명.전자.무기명 투표가 가능하다(국회법 제112조 제2항).
-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하고(국회법 제110조 제1항),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한다(국회법 제113조 제1항).
- 의원은 표결에 있어서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국회법 제111조 제2항).

## ② 기명투표와 무기명투표

기명투표	무기명투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헌법개정안에 대한 투표(국회법 제112조 제4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부거부된 법률안의 재의결</li> <li>- 인사에 관한 사항 (단, 검직에 의한 사직, 원내총무와 의장이 협의한 위원장 사임은 제외)</li> <li>- 국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li> <li>- 국무총리.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안 발의</li> <li>- 탄핵소추 의결</li> </ul>

## 2. 국회의원에게 겸직이 금지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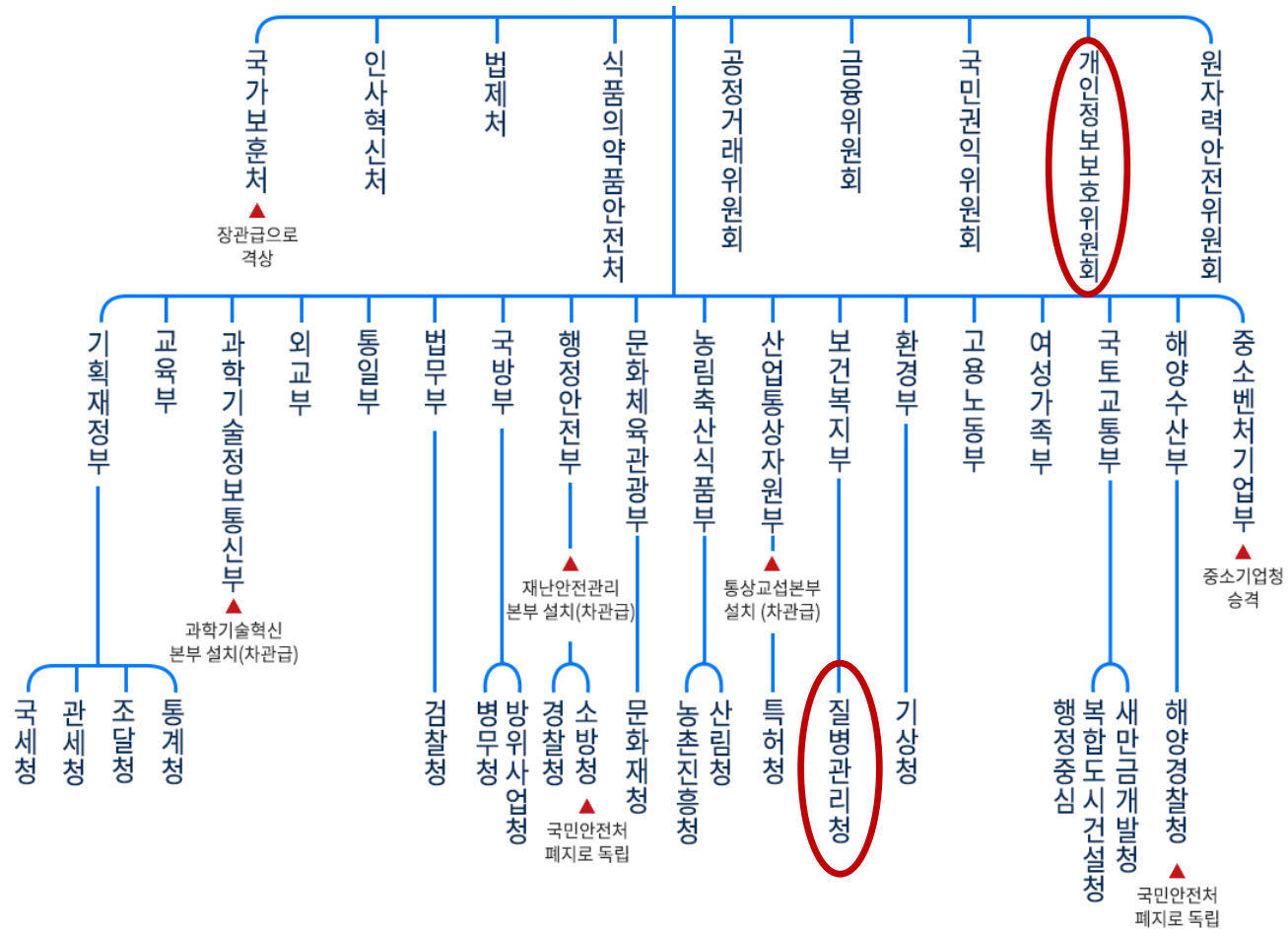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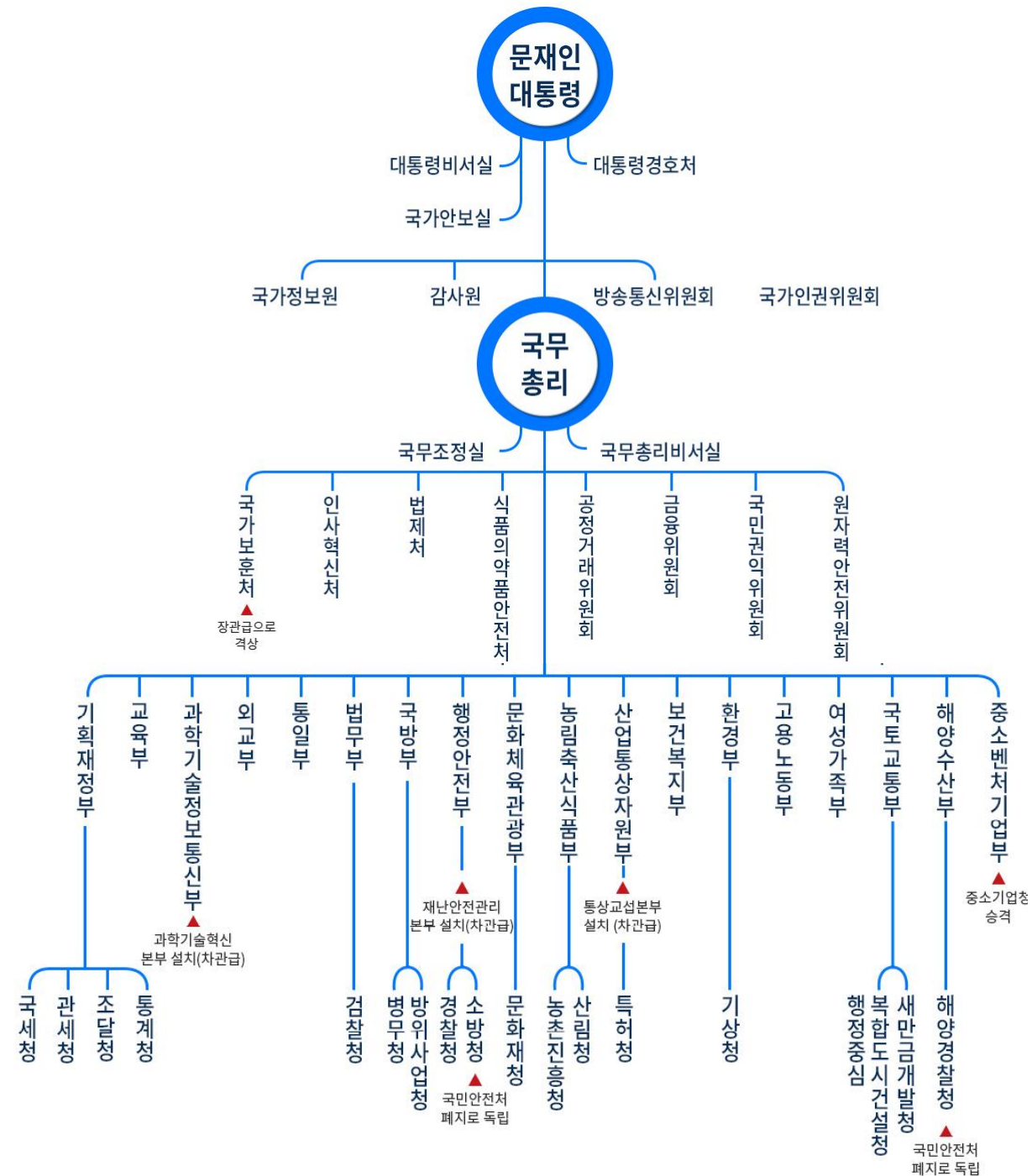
- ①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 ②대통령.헌법재판소 재판관.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지방의회의원
- ③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는 직
- ④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에 규정된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
- ⑤농협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의 임.직원
- ⑥정당법 제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원

## 3. 국회의원의 의무

헌법상의 의무	국회법상의 의무	윤리실천규범상의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렴의 의무</li> <li>- 국가이익우선의 의무</li> <li>- 이권불개입의 의무</li> <li>- 겸직금지의 의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품위유지의 의무</li> <li>- 회의출석의무</li> <li>- 질서준수의무</li> <li>- 국정감사.조사에서의 주의 의무</li> <li>- 의장의 질서유지에 관한 명령복종의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품위유지의 의무</li> <li>- 청렴의무</li> <li>- 직권남용금지</li> <li>- 직무관련 금품취득 금지</li> <li>- 국가기밀누설금지</li> <li>- 겸직금지</li> <li>- 재산신고 및 허례허식 금지</li> <li>- 회의출석의무</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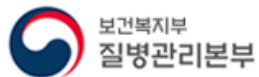
# 대통령과 정부

- 17부처 5처 16청 / 2원 5실 6위원회(51개)
- ▶ 18부처 5처 17청 / 2원 4실 6위원회(52개)
- ▶ 18부 4처 18청 7위원회, 2원 4실 1처(54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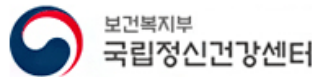
보건복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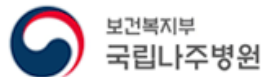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질병관리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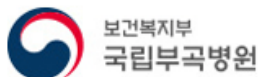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국립정신건강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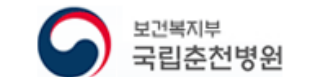
보건복지부  
국립나주병원

국립나주병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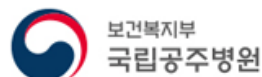
보건복지부  
국립부곡병원

국립부곡병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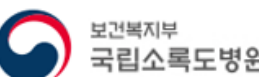
보건복지부  
국립춘천병원

국립춘천병원



보건복지부  
국립공주병원

국립공주병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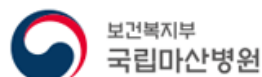
보건복지부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소록도병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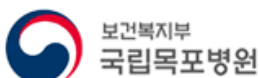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국립재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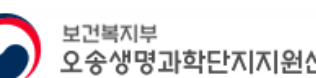
보건복지부  
국립마산병원

국립마산병원



보건복지부  
국립목포병원

국립목포병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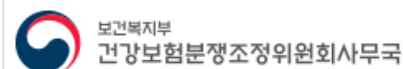
보건복지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보건복지부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

## [질병관리본부 설립목적]

- 질병관리본부의 기원은 1894년 고종의 칙령으로 설치된 위생국.
- 그 후 1935년 설립된 보건원 양성소를 모태로 하여, 1945년 해방 후 이들 기관은 조선방역연구소, 국립화학연구소 등으로 개칭.
- 각각 독립기관으로 설립 운영되던 국립방역연구소, 국립화학연구소, 국립보건원, 국립생약시험소가 통합되어 1963년 12월 16일, 국립보건원으로 발족.
- 현재의 질병관리본부는 국가질병연구관리 기관으로서의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몇 차례 직제가 개정된 후, 국가 감염병 연구 및 관리와 생명과학연구를 수행하는 중추기관으로 발전.
- 우리나라 국가 주도하의 근현대적 질병관리 업무는 100여 년에 가까운 역사를 지니고 있음.

질병관리  
본부장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질병관리청

## 기획조정부

## 운영지원팀

기획조정과

미래질병대비과

위기사통담당관

### 긴급상황센터

위기대응생물테러총괄과

검역지원과

자원관리과

위기분석국제협력과

신종감염병대응과

### 감염병관리센터

감염병총괄과

인수공통감염병관리과

예방접종관리과

의료감염관리과

### 감염병분석센터

감염병진단관리과

세균분석과

바이러스분석과

매개체분석과

고위험병원체분석과

### 질병예방센터

만성질환관리과

만성질환예방과

결핵에이즈관리과

건강영양조사과

결핵조사과

의료방사선과

## 국립검역소

국립인천공항검역소

국립목포검역소

국립통영검역소

국립제주검역소

국립부산검역소

국립여수검역소

국립울산검역소

국립인천검역소

국립마산검역소

국립포항검역소

국립군산검역소

국립김해검역소

국립동해검역소

## 국립보건연구원

### 연구기획과

### 생물안전평가과

### 감염병연구센터

바이러스질환연구과

세균질환연구과

신종감염병매개체연구과

약제내성과

백신연구과

### 생명의과학센터

난치성질환과

뇌질환과

심혈관질환과

내분비대사질환과

호흡기·알레르기질환과

희귀질환과

### 유전체센터

유전체역학과

생명정보연구과

유전체연구과

바이오뱅크과

생명과학연구관리과

의과학지식관리과

##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장기기증지원과

장기이식관리과

혈액안전감시과

## 2000s

- 2016 긴급상황센터 신설 및 위기소통담당관, 위기분석국제협력과, 감염병진단관리과, 운영지원팀 신설
- 2015 의료방사선과, 결핵조사과 신설
- 2014 의과학지식센터 설립  
호흡기알레르기질환과, 의과학지식관리과 신설
- 2012 백신연구과 신설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건립  
한국인 코호트 및 연구인프라 확충
- 2011 질병예방센터 건강영양조사과 신설  
특수연구 실험동(BL3) 인증·운영
- 2010 오송 이전 (2010년 12월)  
장기기증지원과, 장기이식관리과 신설  
장기기식관리센터 신설
- 2009 직제 개편  
호흡기바이러스과 신설
- 2007 공중보건위기대응팀 신설
- 2005 팀제 개편.  
생명과학연구관리팀, 생물안전평가팀, 바이오과학정보팀 신설
- 2004 국립보건원이 질병관리본부로 확대 개편.  
소속기관 : 국립보건연구원, 13개 국립검역소
- 2002 중앙유전체연구소(現 유전체센터) 신설

## 1990s

## 1970~1980s

## 1945~1960s

- 1999 전염병관리부 신설
- 1998 국립사회복지연수원을 통합 보건복지연수부 신설
- 1996 식품의약품안전본부 분리  
특수질환부(現 생명과학센터) 신설
- 1992 연구기획과 신설
- 1981 국립보건원으로 개칭  
후천성면역결핍증과 신설
- 1978 위생부가 국립환경연구원으로 독립
- 1977 마산분원 신설
- 1966 국립보건연구원으로 개칭
- 1963 국립방역연구소, 국립화학연구소, 보건요원양성소, 국립생약시험소가 국립보건원으로 통합
- 1959 중앙보건원으로 통합 출범
- 1945 모범 보건소, 조선방역연구소, 국립화학연구소 설립

## 질병관리청 연혁

교섭단체/정당		지역구	비례대표	계	비교(%)
더불어민주당		163	14	177	59
국민의힘		84	19	103	34.33
비교섭단체	정의당	1	5	6	2
	국민의당	0	3	3	1
	열린민주당	0	3	3	1
	기본소득당	0	1	1	0.33
	시대전환	0	1	1	0.33
	무소속	5	1	6	2
계		253	47	30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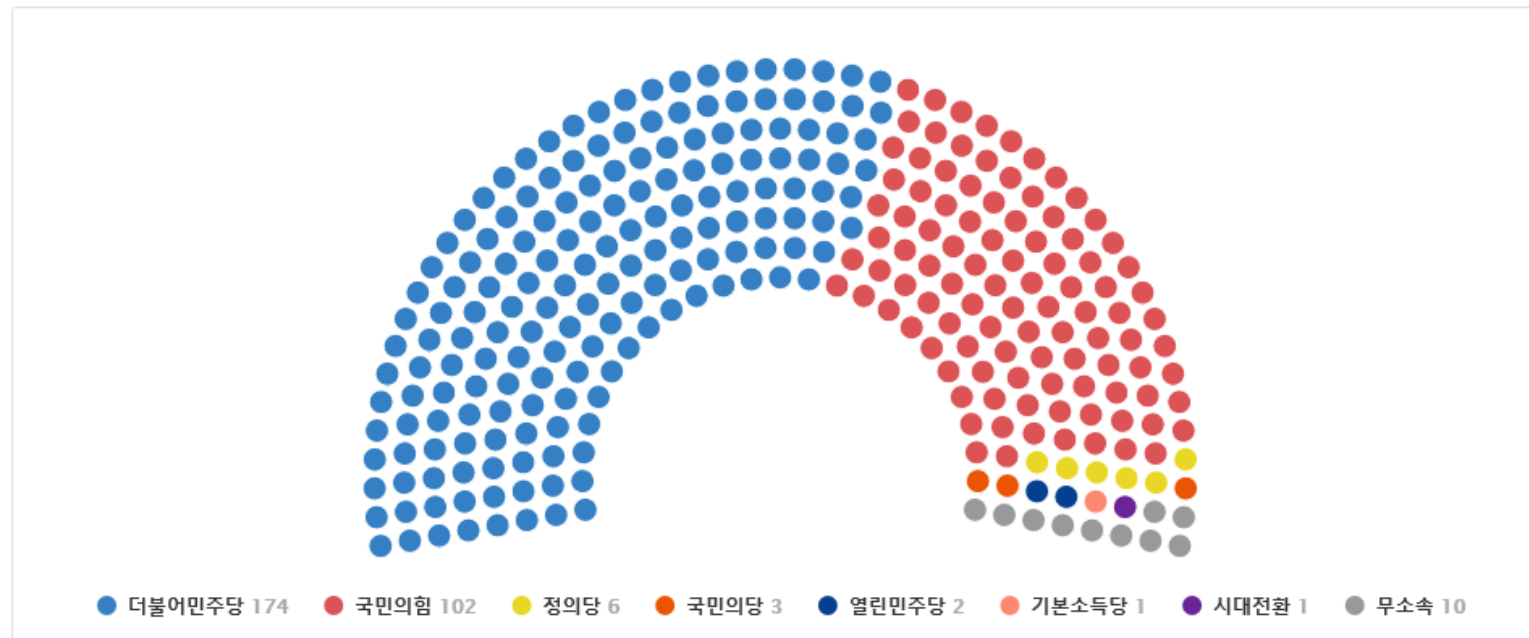
더불어시민당 17석

미래한국당 19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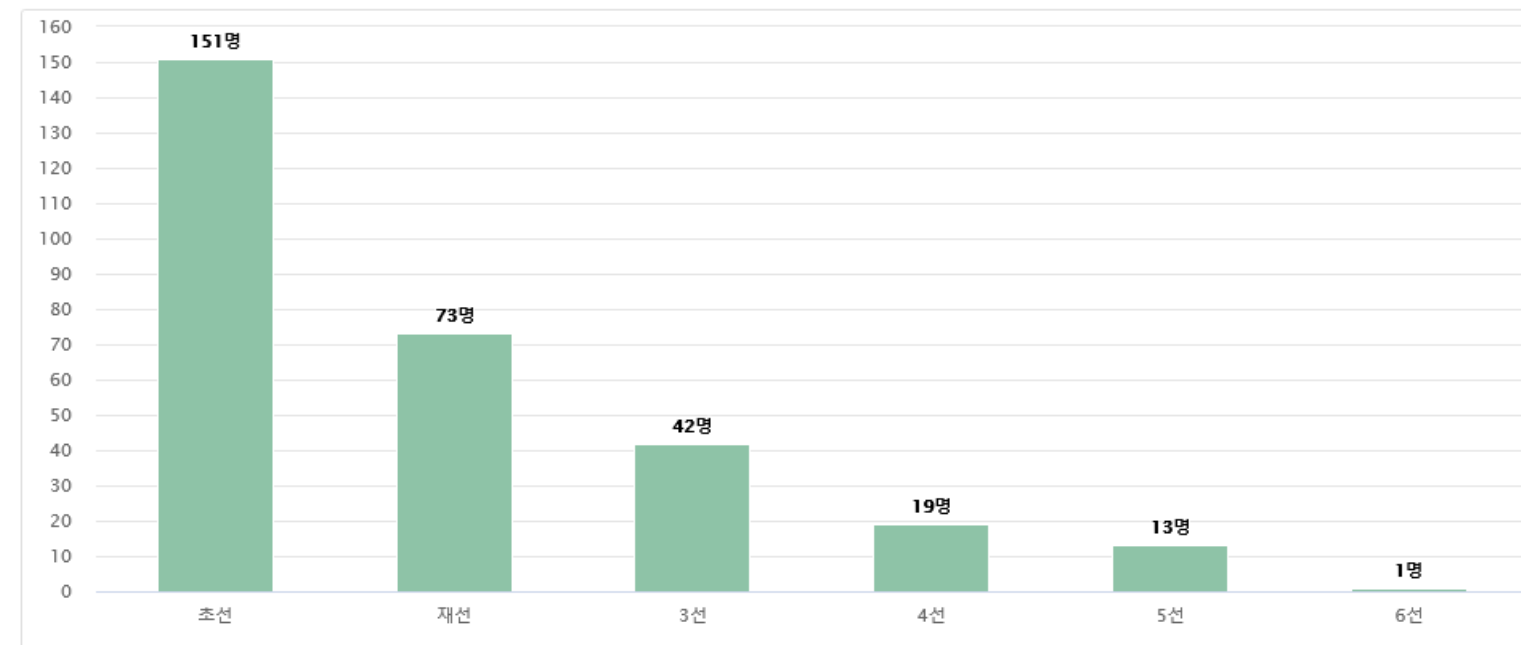
「국회법」 제3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고 기준, 2020년 06월 01일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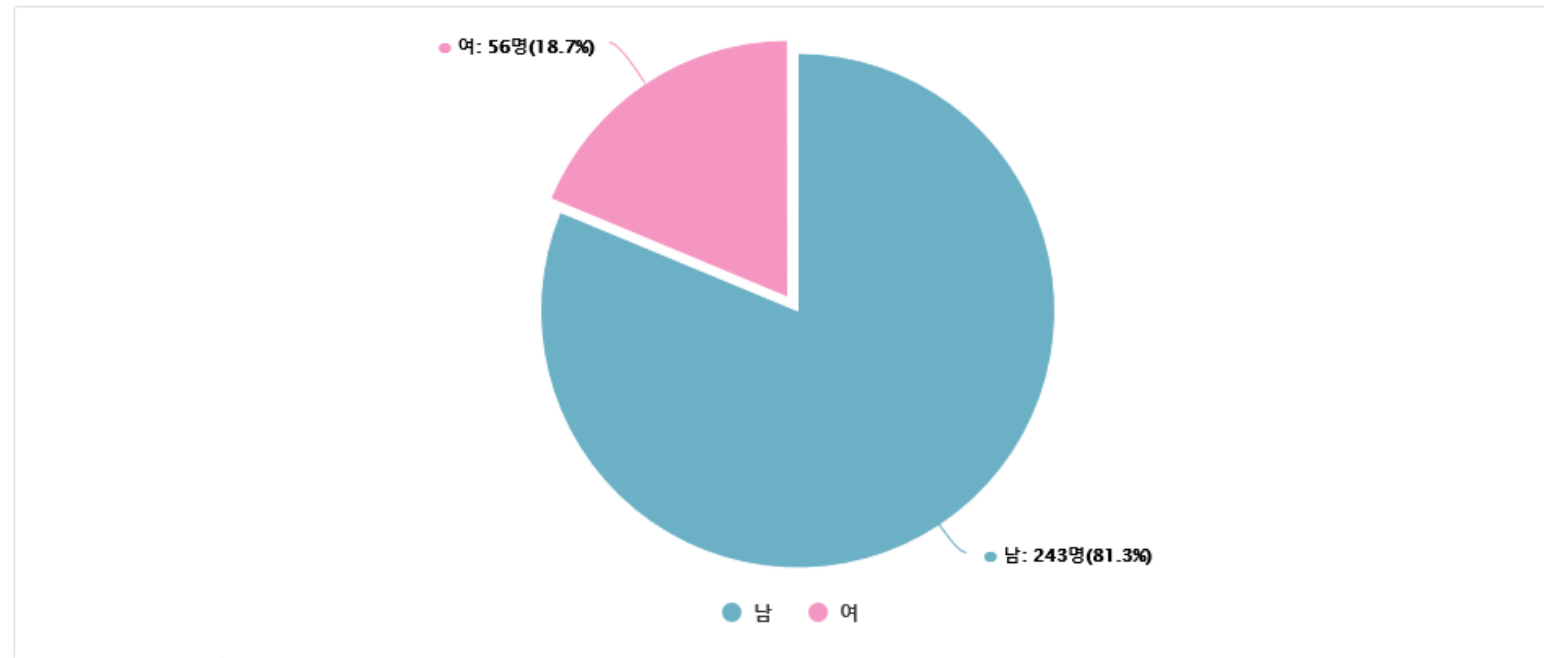
## ○ 정당별 의원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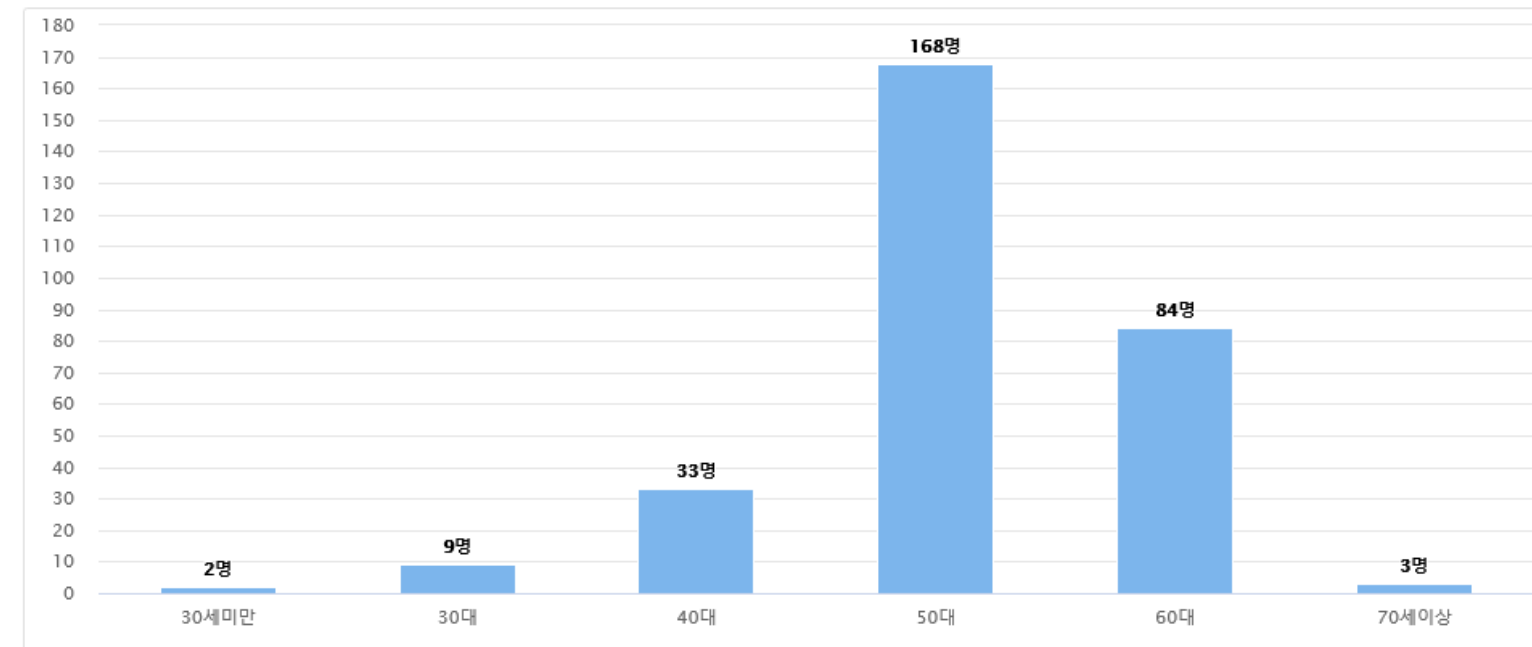
## ○ 당선횟수별 의원현황



## ○ 성별 의원현황



## ○ 연령별 의원현황



모두 고생 많았어요.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주에 만나요.